

【 2016.04.29(금) 강원일보 】

상운 아버님 연일정씨 세환께서
2016년 4월 26일 오후 12시 30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 강원대학교병원

조문일 : 4월 30일(토) 오후부터 가능합니다.

발인일자 : 2016년 5월 2일(월) 오전 6시 30분
장지 : 춘천시 동면 지내리 21번지 선영

부인 김정민

아들 정상운

딸 지연

수민

사위 김범래

장례식장 : G-1강원미망 본사
전화번호 : 033-260-5100

생전 고인과 애정이 뜻을 달리 조화와 부화함의 정에 헌사합니다.

(개별봉사
생활)

고정세환 회장 회사장 공고

당사 정세환 회장께서 2016년 4월 26일 오후 12시 30분 별세하셨기에 영결식을 다음과 같이 대양·G1강원미망·강촌레일파크 회사장으로 거행함을 삼가 알립니다.

장례식장 :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장례식장주 : G-1강원미망 본사

■ 장례위원회 : 전창용 조남현

■ 부uri장 : 김태우 박용석 김명희 조창진 이경희 우현진
류지한 김병철 주진 이창용

■ 장례위원 : 권상만 주향수 정희수 이경희 황달중 이수민
송희선 김진동 허병 전종호 이이표 홍대선
김정선 김대환 이학우 권오정 김태정 하정우
김근정 김재기 이종우 김도환 권수환 신호열
허정구 김민영 박시영

(주)대양·(주)G-1강원미망·(주)강촌레일파크

상운 아버님 연일 정씨 세환께서
2016년 4월 26일 오후 12시 30분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 강원효장례문화원
조문일 : 4월 30일(토) 오후부터 가능합니다.
발인일 : 2016년 5월 2일(월) 오후 6시 30분
장지 : 춘천시 동면 지내리 21번지 선영

부인	김정민
아들	정상운
딸	지연
수민	
사위	김범래

연락처 : G1강원민방 정영아 043-5100

생전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조화와 부의 마음에 전해드려 사망입니다.

(개별로 고생할)

고 정세환 회장 회장 공고

당사 정세환 회장께서 2016년 4월

26일 오후 12시 30분 별세 하셨기에 영결식을 다음과 같이 대양·G1강원민방·강촌레일파크 회장으로 거행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영결식일자 :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 장례위원회장 : 김천용 주남현
■ 부위원장 : 김태우 박용석 김종필 조창진 임병화 우원길

■ 장례위원회장 : 김천용 주남현

하정구 김정기 이종호 김도환 권순환 신호열
허정구 김정기 이종호 김도환 권순환 신호열
박시영

(주)대양·(주)G1강원민방·(주)강촌레일파크

6개 건설사 레고랜드 관심

재공모 설명회 참여… 책임준공 최우선
도, 조건 안맞을땐 해외건설사로 확대

속보=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시공사를 재공모(본지 4월 23일자 2면)한 가운데 다수의 건설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지난 21일 기존 레고랜드 조성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계약 해지를 하고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재공모에 나섰다.

도는 이들 건설사에 제안서를 보내고 지난 2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 모두 6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레고랜드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는 현대건설과 '책임준공'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계약을 해지한 만큼 재공모에서는 책임준공

을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했다.

현장설명회에는 지난 27일 김성근 도의원이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사전 내정설을 제기한 특정 건설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는 사전 내정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도 관계자는 "최고의 조건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시행사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시행사 사전 내정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들 건설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최종 시공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참여 건설사가 없거나 공모에 응한 건설사와 계약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공모대상을 국내는 물론 해외 건설업체까지 확대해 재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늦어도 6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8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레고랜드 사업부지 우선 매수권 문제와 문화재보존지역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만큼 시공사만 선정되면 8월 착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레고랜드 사업시행사 엘엘케이들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였던 현대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처리했다.

백오인 105m@kado.net

도시멘트사 대기업 매각에 '희비'

건설업체 전체 공사비 절감 효과 기대
고용불안·레미콘업계 경영난 가중 우려

강원도내 시멘트사들이 대기업과 금융권에 잇따라 매각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회비가 옛갈리고 있다. 28일 도내 건설업체와 레미콘 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영월공장 등 강원도 내 4개 공장을 보유한 국내 시멘트업계 1위 쌍용양회의 최대 주주가 한동호회로 '한동호회'로 변경됐다.

강릉 육계에 있는 라파즈한라시멘

트는 국내 사모펀드인 글로벌프라 이랫에쿼티(PPI)에 인수 절차를 마무 리하고 사실상 금융권에 매각됐다. 또 유진그룹도 최근 삼척에 근거지 를 둔 동양지분을 10.41%까지 늘려 회대주주가 되는 등 도내 향토 시멘트사들이 잇따라 매각됐다.

건설업체는 도내 시멘트사의 대기

기다. 이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시멘트를 공급할 경우 단가가 하락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시멘트 단가 하락은 레미콘 기력까지 영향을 줘 전체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대기업이 시멘트를 대량 공급

할 경우 강원도를 비롯한 중소·영세 레미콘업체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결국 레미콘 단가를 대기업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 도내 115개 레 미콘 업체의 경영난이 기중될 수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민의 일자리

퇴출도 우려된다.

한엔컴퍼니로 인수된 쌍용양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우, 내부적으로 감원 폐렴이 불고 도 경제단체 관계자는 "도내 시멘트 시들의 대기업·금융권 매각으로 공사 비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민의 일자리 퇴출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며 "고용승계와 지역업체 건으로 희망퇴직도 권고증이며 구조 조정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고 말했다.

안은복 no@kado.net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10건 중 1건

특허·신기술공법 막무가내식 활용

경기도 A시는 지난 2013년 7월 도로확·포장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을 사전검토 없이 선정하고 특허보유자와 사용협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경남도 B군은 2013년 5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입찰공고하면서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개로 제한했다.

C건설은 지난해 9월 금속 가공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시험절차도 거치지 않은 중국산 H형강을 사용했다.

D감리업체는 지난해 10월 E기업 사옥 신축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F차장을 신고하고, 실제는 G과장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 건설관리 취약부문 점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공사에서 10건 중 1건 끝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자체가 계획·설계 용역 입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당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과 건설 관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우선 추진단은 건설 관리 취약 분야를 △계약 △시공 △감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에 착수했다.

계약 분야는 특허·신기술 공법과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로 구분해 조사가 이뤄졌다.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공사는 지난 2010~2015년 발주된 1만

1539건을 전수조사해 위법행위 1483건을 적발했다.

이 중 1195건은 공법 필요성 사전검토 누락 등 공법선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288건은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동계약 방식으로 입찰공고된 계획·설계 용역은 2384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370건을 적발했다.

지자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별다른 사유 없이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가 1288건에 달했고,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을 체결한 용역이 82건이었다.

시공 분야와 감리 분야에선 KS에 미달되는 철강재 사용과 감리 일지 허위작성, 감리원 미배치 등에 따른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추진단은 KS 규격 미달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한 공사현장 9곳과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 공장 6곳을 적발했고 전국 대형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대상 33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파악했다.

박경남기자

뉴스 둘 기

정부, 건설 비리 공무원 철퇴

비리의혹 수사의뢰 지자체는 예산삭감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은 이번 건설 관리 취약분야 집중 점검에서 적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에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와 행정처분의 철퇴를 내렸다.

계약 분야 중 특허·신기술 공법 적용 공사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등 특혜 의혹이 있거나 부실 설계·부실 시공 등 사안이 중대한 일부 사례를 조사해 비리 의혹이 있는 18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구체적 사유를 무기로 지자체 공무원 27명에 대해 해선 정계를 요구했다.

계획·설계 용역 입찰 과정에서 공동계약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지자체 공무원 165명도 구체적 사유가 크고 자칫 부실설계의 범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용역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한 34개 지자체에 대해 선 행정자치부가 내년 지방교부금을 지급할 때 총공사금액(71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71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시공 분야에선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한 철강재를 사용한 15개 업체를 고발한 데 이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감리일지를 허위 작성하거나 감리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추진단은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특허·신기술 보유자 등과 공무원 간 유착 방지를 위해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를 상대로 하도급 계약을 강요하는 등 계약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행자부 예규에 반영했다.

또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을 등의 소방시설공사에는 책임감리원 외에 보조



박순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 부단장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 주의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일정 규모 이상 소방시설공사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 의무화

감리원을 의무적으로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감리업체가 소방관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기준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를 강화했다.

KS규격 미달 자재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선 품질시험 단계별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고 품질시험 결과를 준수하지 않은 품질시험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생산, 수입통관, 유통, 건설현장 등 단계별로 기준 미달 철강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경남기자 knp@

아하! 그렇구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

A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회사가 C회사에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요건을 갖추면, C는 B로부터 받을 하도급대금을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먼저 ①B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으로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B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C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B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C가 공사를 시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직접지급 요청은 C가 A에게 하여야 하지만, B가 A의 위임을 받아 할 수도 있다. 직접청구권은 직접청구 요청이 A에게 도달할 때에 발생한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위 ①, ②, ③ 중 하나의 요건도 직접지급 요청이 A에게 도달한 때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A에게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한 후에 위 요건이 소멸하였더라도 일단 발생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B의 파산으로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한 후에 B의 파산이 폐지된 경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또는 B가 기성 대금 지급을 2회 지체하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한 후에 B가 일부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A의 직접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직접지급 요청이 A에게 도달한 때까지 시공이 완료된 부

분에 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시공된 부분의 하도급대금까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C가 새롭게 시공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직접지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C의 직접지급 요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한편 위 ①, ②, ③의 요건이 없더라도 A, B, C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C의 직접지급 요청이 없어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합의는 반드시 3자가 한 자리에 모여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복사적, 순차적 합의도 가능하다. 건설방행상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는데, 이때는 직접지급 합의를 한 후 실제 C가 시공을 하였을 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A가 C에게 직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B가 A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직불동의서만으로 직접지급의 3자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자료들을 종합하여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용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강원도의회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대통령 공약이자 강원도민 염원인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선거때마다 '단골 공약'이지만 아직도 현실화 안돼…

"동서고속철도 더는 못미룬다" 〈서울~속초〉 똘똘뭉친 강원지역 건설업계

사업타당성 조사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강원도와 강원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즉각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의회와 강원 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동서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강원간단련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도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강원지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로 구성된 도내 건설단체 연합체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동서고속철도의 사업타당성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가장 큰 화두"라고 말했다.

동서고속철도는 지난 1987년 대선 이후 30여년간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골

사업타당성조사 발표 지역에
"속원사업 조속추진" 한목소리
울림피 이후 물량기금 우려도

공약이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 과정에 있지만 기재부는 발표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정부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발표를 보류하고 정책분석(AHP)을 통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강원도에 전달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정부의 이런 입장이 사업 무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최근 동서고속철도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언어에 발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원도도 최근 최문순 지사와 김성도 의장, 동서고속철도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단체장 등과 대책회의를 여는 등 정부의 입장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원도와 도내 건설업계가 동서고속철도 사업에 이처럼 한목소리로 대

응에 나선 이유는 평창올림픽 관련 건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도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원도는 최근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매년 6조원이 넘는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관련 공사가 끝나면 정부 지원 예산이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설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수요에 따른 SOC 공급 원칙보다는 공급이 우선해야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현재는 B/C 수치가 낮을 수 있지만 먼저 고속철이 건설되면 관광 수요 등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공사가 끝난 이후의 공사 물량 감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동서고속철도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2분기 철근값 '58만5000원'

〈SD400-10mm, 현금가〉

진통 끝에 2분기 철근 기준 가격이 t당 6만원 인상된 58만5000원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014년 분기별 가격 협상 방식이 도입된 이후 첫 인상이다.

28일 대한건설자재협회(이하 건자회)와 제강업체는 2분기 철근 (SD400-10mm, 현금가) 기준가격을 1분기의 52만5000원에서 6만원 인상한 58만5000원으로 합의했다.

기준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4월 마감을 앞두고 불안했던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강사의 철근 재고는 16만t 수준으로 가공물량 등을 제외하면 15만t을 밀집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4월에만 100만t 이상의 철근이 팔려 제강사들의 목표(95만t)를 넘어서고 최대 110만t 이상도 판매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준가격 타결마저 늦어져 만 기재부는 발표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정부가 비용·편익(B/C)

1분기 보다 6만원 올려
분기별 협상 이후 첫 인상

천황에 놓여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소량 미지도 당 기준 가격이 49만원을 호가해 미제 기능을 상실했을 상태다.

다만 인상된 제강업체가 당초 요구한 인상폭을 100% 수용한 결과에서 건설업체에는 작지 않은 과정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기준 가격을 협상할 때 제강업체와 건자회는 각각 제시한 가격의 중간 정도로 조정, 최종 가격을 결정했다.

이번에도 건자회는 3월 중순 첫 협상을 시작할 당시 3만5000원 인하를 요구했고 제강업체의 인상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견지해 왔다.

때문에 제강업체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매우 어려웠다.

한 건설사 구매 담당자는 "가격을 인상한다고 부족한 철근이 갑자기 빨리 공급되는 것은 아닌데 제강사들이 1분기에 의도적으로 수급 조절을 하면서 가격이 인상된 축면이 있어서 6만원

인상은 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렵게 2분기 기준 가격이 결정됐지만 3분기 협상까지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다.

1분기 협상부터 건자회에서 관철했던 철 스크랩 가격 변동폭을 얼마나 적용할지가 문제다. 과거 건자회와 제강업체는 철 스크랩 가격 변동폭을 100% 반영해 기준가격을 정했다.

그러나 건자회에서는 철근 원가 중 철 스크랩은 최대 55%를 차지할 뿐이니 6만원이 올랐다고 철근 값은 6만원 올려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견지해 왔다.

제강업체는 8년 이상 지켜온 협상 기준을 깨지기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해왔다.

1분기에는 건자회 운영진이 꾸려지고 치른 첫 협상이어서 급하게 넘어갔고, 2분기에는 관철시키다는 입장이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황이 나빠지자 이번에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문수이기자 moon@